

정가춘추



김진수

본보 서울취재본부장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이끄는 집권여당 연합이 과반을 확보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운데 한국의 민주(民草)들 사이에서 반일 여론이 들끓처럼 번지고 있다.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떠드는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지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 ‘한일 양 국가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는데 한국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입장을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한일기본조약’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일단 덮어두자. 오늘은 대신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한국 대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주요한 팩트를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구 일본제철)를 상대로 한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송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923년부터 1929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 평양, 보령, 군산 등에서 거주하던 사람들로 당시 16~20세 정도의 청소년이었다.

구 일본제철이 만든 모집광고에는 2년간 훈련을 받으면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 이들이 한 일은 “화로에 석탄을 넣고 깨뜨려서 뒤섞거나, 철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석탄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있고 기술 습득과는 별 관계가 없는 매우 고된 노역”이었다.

한국 대법원은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해야 했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했으며, 탈출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원고)이 주장하는 구 일본제철(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판시했다.

이처럼 한국 대법원이 분명히 보상이 아니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부와 한국 내 친일파·토착 왜구들은 지난 1965년 당시 박정희 정권과 체결한 이른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자신들은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을 한국에 전달, 정치·도덕적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기가 차는 것은 우리 내부 일각에서도 일본의 막가파식 행동이 옳다고 떠들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태를 종합해 볼 때 친일파 또는 토착 왜구로 불리기도 하는 이들은 주로 자유한국당, ‘태극기 훼손부대’(무의식적으로 쓰는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민주공화당에 뿌리를 둔 한국당의 친일적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만 몇 개 열거하자면 이렇다. 7월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는 공동발표문에 ‘하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했으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결국 발표문에서 빠졌다.

앞서 7월4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갇혀 감정의외교 갈등의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 감상적 민족주의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일본의 막가파식 행동을 정당화한 것이다.

‘태극기 훼손부대’ 참가자들은 “일본은 일본이 이빠”, “반도체로 그치면 안 돼. 지금 일본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가 죽어 아예”, “한국이 망해야 일본의 고마움을 안다”는 등의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뱉어낸다.

또 ‘일베’ 사이트에는 국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비롯하며 거꾸로 일본제품 구매 인증 샷이 올라온다. 그리고 이런 댓글들이 붙어있다. “불매는 오히려 수출의 쇼일뿐이다”, “넌 비근성의 감지들이 불매운동을 한다”, “언론에서 불매운동 중이라고 몰아간다. 그래야 여행갈 돈 없는 개돼지들이 그걸로 자위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런데 문득 한국당, 태극기 훼손부대, 일베의 한심한 작태를 보다가 어떤 기시감이 들었다.

그렇다! 바로 이들. 한국당, 태극기 훼손부대, 일베는 그동안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집단 아니었는가! ‘5·18 망언’ 김순례를 슬그머니 최고위원에 복귀시킨 한국당, 아무리 객관적 증거를 들어대도 지만원의 말도 안 되는 ‘북한군 침투설’에 환호하는 태극기 훼손부대, 5·18 사망자관(棺) 사진을 보고 ‘흉어 태백’라고 패륜적으로 조롱한 일베 회원…

이쯤 되면 ‘친일파·토착 왜구=5·18 왜곡 집단’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친일파·토착 왜구들은 왜 5·18 또는 불매운동 같은 것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역설적이지만 친일파·토착 왜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5·18과 불매운동 같은 결집된 민초들의 힘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를 쓰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날조하고, 왜곡하려고 혈안이 된 것이란 말이다.

친일파·‘토착 왜구’들의 공통점

나주 SRF 거버넌스 파국위기 피해야 한다

나주 고행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사태가 ‘산 너머 산’이다. 주민 반발로 시험가동이 중단된 열병합발전소가 민간거버넌스의 중재로 분쟁해결에 청신호가 켜졌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의 잠정합의안 거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는 지난 10차 회의에서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시험가동 후 환경 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 방식을 SRF로 할지 LNG로 할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난방공사는 발전소 연료 방식을 바꿀 경우 발생하는 손실보전의 주체와 보전 방안이 합의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열어 합의안 수용을 보류했다.

11차 회의에서도 난방공사는 합의안에 손실보전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연료를 LNG 사용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분과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 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합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사측은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지역난방 사용자들에게 열 요금 상승 등 추가적인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전남도·나주시·주민대표 격인 범시민대책위 등은 시험가동 후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거버넌스는 다음달 7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주민대표들이 난방공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거버넌스 탈퇴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12차 회의에서 거버넌스에서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 거버넌스를 탈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파국 위기로 치닫고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시험가동 3개월 만에 환경 유해성을 우려하는 나주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이 중지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며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다. 거버넌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양쪽 다 피해를 보는 소송전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 서로 양보하면서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균형발전 유관기관 결집 자치분권 속도내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2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균형발전 유관기관들이 손을 잡고 힘을 모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하는 균형위, 지방정부를 이끄는 시·도지사들의 대표인 협의회, 그리고 분야별 국가정책개발을 책임지는 씽크 탱크인 경사연이 역량과 지혜를 모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및 연구 ▲정책개발과 정보교류 ▲정책 컨퍼런스 등 학술·연구행사 정례개최 ▲균형발전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시·도지사들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조직 운영권 보장 등을 건의했다.

또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등을 인상에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의 사무

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으로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들이 계획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방이양일괄법’은 여야 정경 속에서 국회에서 낯잠을 자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찰이 자치경찰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자치경찰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방분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명분도 없다. 무엇보다도 입법분권 첫 단추인 권한 지방이양이 시급하다.

균형발전 유관기관들의 역량결집을 통해 앞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자치분권 조화형 균형발전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되길 바란다.

현장칼럼



임철진

광주서구 광천동장

나는 해바라기를 무척 좋아한다. 그 생김새가 태양을 꼭 닮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는 듯해서다. 또한 나를 보며 항상 활짝 웃어주고 있는 듯 보여 해바라기를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이렸을 적 시골 풍경에는 해바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한여름 시골집 담벼락 아래 큰 줄기 끝에 둥그런 얼굴로 하늘을 향해 깨끗하게 서있는 해바라기는 아이들의 그늘막이도 되어 주었고, 잎사귀는 우산이 되어주었다. 시골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었던 해바라기는 키다리 아저씨였고, 해바라기씨앗은 참 고소해 아이들의 간식으로도 최고였다.

그래서 나에게 해바라기는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는 꽃이고, 그 당시 같이 보냈던 해바라기는 키다리 아저씨였고, 해바라기씨앗은 참 고소해 아이들의 간식으로도 최고였다.

연초에 나는 광천동장으로서 마을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 마을이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가 불가하고 사업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던 중 마을 주민총회를 하기 위해 각계각층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의견 중에 광주천 독에 1m 거리로 해바라기를 심자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천변 도로는 봄철에 벚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벚꽃은 화사하고 아름다운 반면에 딱 10일 정도만 지나면 빨리 지기 때문에 언제나 아쉬움이 남았는데 여름철에 해바라기 꽃밭을 조성해 여름철에 해바라기 꽃밭을 조성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광주천을 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해바라기가 피는 7월에는 광주제계수영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위해서도 광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

광주천에 해바라기를 주민들과 함께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게 중요했다. 각 통장들과 함께 주민 300여명을 만나 의견과 설문을 받고,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3월말께 주민총회 때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참석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압도적인 주민찬성으로 광주천에 해바라기 꽃밭을 만드는 데 동력을 얻었다.

문제는 해바라기밭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이런 사업을 하기위한 경험도 없고 예산도 없었지만 방법을 찾으면 안되는 게 없다 싶어 구청 건설과에 주민들의 뜻을 전달했더니 협조를 받았고 마을 주민들 중에 꽃가꾸기 경험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주민을 책임관 리원으로 지정했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4월8일 해바라기밭에 종자를 심었다. 그리고 통장단 및 주민 10여명과 함께 해바라기씨를 호미로 땅을 파서 심는 작업을 한 후, 다음 날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이 밀거름을 줬다. 해바라기씨를 비둘기가 파서 먹어버리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비둘기를 쫓기도 했다.

한 달 가량이 지나자, 마을주민들 경로당회원 30여명과 함께 운동기구 주변 피를 제거하고 해바라기 모종을 심었다. 광암고 다리밑의 운동공간까지 주변을 해바라기 꽃밭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

새롭게 심어진 모종에는 광주천의 물을 떠다 꽃밭에 물을 주는 데도 수작업으로 직접하니 보통 어려울 작업이 아니었다. 이전 해바라기들이 잡초의 방해를 받지 않고 클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하는 풀과의 전쟁이었다. 5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새

마을부녀회, 보장협의체, 적십자봉사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각 단체별로 돌아가며 새벽에 풀매기 작업을 해주었다. 이렇게 풀매기, 물주기, 모종, 이식, 꽃밭 살피기의 작업을 무려 1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일부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잡초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주민들의 정성과 사랑을 받고 자란 해바라기들이 이젠 제법 꽃을 피우며 군락을 형성하며 발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초에 이곳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주민이 해바라기 키우는 손길’의 제목으로 그간에 노력했던 사진들을 1장의 플래카드에 정리해 주민의 힘으로 가꿔놓은 해바라기밭의 의미를 새겨줬다. 또한 80개의 해바라기 꽃이 핀 작은 화분을 만들어 ‘해바라기 웃음 꽃피는 광천동’스티커를 붙이고 동네 주요 상가에 나눠주었더니 주민들이 활짝 웃으시면 기뻐하신 모습을 보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낄 수 있었다.

‘해바라기 사진을 집에 걸어두면 복이 들어오고 돈이 굴러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광주천 광암교에서 광천2교까지의 구간에 해바라기 꽃밭에서 사진 많이 찍으시고 광주천을 많이 사랑해주시길 동장으로서 바라본다.

보 및 단속활동, 학교 밖 가출 청소년 등의 선도 보호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학교생활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방학기간에



/고안나·화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뿐만 아니라 사회나 가정에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독자 투고

방학기간 청소년 탈선 예방에 관심을

이달 말이면 모든 학교가 한달여 동안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방학 전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일상에서 탈출한다는 해방감이 들어 마음이 들뜨게 된다. 이럴 때 자기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탈선과 범죄에 빠지기 쉬운데

청소년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절도와 폭력이다. 특히 절도는 방학이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이 휴가비용을 마련을 위해서나, 또 레거리 어울려 다니며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탈선의 주원인은 문화 및 놀이공간의 부족과 맞벌이 부부 증

가, 가정불화 등으로 인한 자녀에 대한 부모와 사회적 관심의 부족이다.

학교 등은 방학기간에 다양한 체험을 할 기회를 주어 건전한 문화활동을 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행 등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에서도 청소년들이 방학 때 많이 가는 해수욕장이나 PC방, 공원 등의 순찰,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그래픽 뉴스

작년 ‘버려진 동물’ 12만마리 넘어…20%는 결국 안락사

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버려지는 동물도 매년 증가해 작년에만 12만 마리가 길에서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주인을 만나는 경우는 10마리당 3마리에 미치지 못했고, 10마리 중 2마리는 보호소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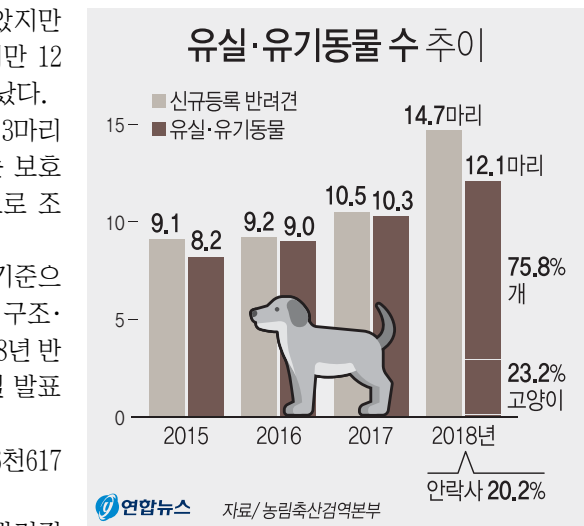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양 현황 등을 집계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6천617마리로, 전년보다 39.8%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등록된 누적 반려견 수는 130만4천77마리가 됐다. 그러나 반려동물 수가 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유기·유실되는 동물 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12만1천77마리로, 전년보다 18% 늘었다. 유실·유기동물 수는 2015년 8만2천82마리, 2016년 8만9천732마리, 2017년 10만2천593마리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구조된 동물 12만1천77마리 가운데 개가 75.8%를 차지했고, 고양이는 23.2%였다. 이들 동물이 다시 분양돼 새 주인을 만나는 경우는 27.6%였다.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이보다 더 적어 13.0%에 불과했다. 구조된 동물 가운데 23.9%는 자연사했고, 20.2%는 안락사됐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6천617마리로, 전년보다 39.8%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등록된 누적 반려견 수는 130만4천77마리가 됐다. 그러나 반려동물 수가 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유기·유실되는 동물 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12만1천77마리로, 전년보다 18% 늘었다. 유실·유기동물 수는 2015년 8만2천82마리, 2016년 8만9천732마리, 2017년 10만2천593마리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구조된 동물 12만1천77마리 가운데 개가 75.8%를 차지했고, 고양이는 23.2%였다. 이들 동물이 다시 분양돼 새 주인을 만나는 경우는 27.6%였다.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이보다 더 적어 13.0%에 불과했다. 구조된 동물 가운데 23.9%는 자연사했고, 20.2%는 안락사됐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정기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화부 650-2067

지역특집부 650-2060

체육부 650-2065

사진부 650-2080

논설실 650-2006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입국 650-2079

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